

제102호
2015.12



지방자치 20년 :
지역발전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방향

- I. 지방자치 20년의 과정과 변화
- II. 지방자치의 공과
- III. 지역발전 환경 변화와 새로운 정책 트렌드
- IV. 자치시대의 지역발전 방향

지방자치 FOCUS 제102호(2015. 12.)


발행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하혜수 **편집위원장** 최인수 **위원** 임성일 서정섭 안영훈 주재복 윤영근

내용문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김선기
02-3488-7342, sun@krila.re.kr

배포문의 발간 담당자(02-3488-7361)

본 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krila.re.kr **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지방자치 20년 : 지역발전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방향

김선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지방자치 20년 : 지역발전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방향

I 지방자치 20년의 과정과 변화

1. 지방자치 20년의 추진과정

1) 민선 1기(도입기 : 1995~1998년)

- 1995년 6월 27일 역사적인 동시 지방선거의 실시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정치적 분권화,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성화 발전 등을 목표로 25년 만에 부활
- 지방자치에 필요한 지자체 경쟁력 강화와 도농 간 상호보완 발전을 위해 1995년~1997년 사이에 4차례에 걸쳐 41개 시와 39개 군이 통합하여 40개의 '도농복합시'가 탄생
- 지방자치와 함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을 시도
 - 산·학·연 혁신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1997년 6개 시범단지를 지정한 이후 16개 시도에 1개 이상의 산업기술단지인 테크노파크(TP)를 지정·육성
 - 지역기술혁신센터(TIC, 1995), 지역협력연구센터(RRC, 1995), 지역SW지원센터(1996) 등 R&D 센터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지원

2) 민선 2기(모색기 : 1998~2002년)

- 김대중정부 들어서 1999년 1월 사무이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사무이양을 추진
- 지방자치의 도입과 함께 문화·관광·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노력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전개
 - 지방자치제 도입과 동시에 지역축제가 폭발적으로 증가('96 728개 → '09 937개)
 - 민선 1기의 광주비엔날레('95), 부산('96) 및 부천('97) 국제영화제에 이어 민선 2기에서도 경주세계

문화엑스포('98), 강원 동계아시안게임('99), 부산아시안게임('02) 등 대형 문화·스포츠 이벤트가 경쟁적으로 개최

-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벤트의 지원을 위한 물리적 거점시설로서 서울 코엑스(COEX), 대구 엑스코(EXCO), 부산 벅스코(BEXCO) 등 대형 컨벤션 센터를 건립

- 1999년부터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4+9개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에 착수하여 부산(신발), 대구(섬유), 경남(기계), 광주(광산업)등 4개 지역에 대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시작

3) 민선 3기(추진기 : 2002~2006년)

- 노무현정부에 들어서 지방분권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흡
 - 2003년 지방분권의 비전과 청사진을 담은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의 하나인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설치·운영
 -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자치권을 확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2002년) 및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조성
- 지방분권정책과 병행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력하게 전개
 -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하였으며, 계획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
 -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분산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0개의 혁신도시('05년), 6개의 기업도시 조성('04년),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03년), 지역특화발전특구('04), 대덕 R&D 특구('05년) 등 각종 특구사업을 시작
 - 혁신클러스터 사업('04년),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 '04년), 신활력사업('04년) 등 다양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
- 대형 국책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혐오시설과 선호시설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심화
 - 부안의 방폐장 건설계획 사례('04년)가 대표적인 NIMBY 갈등사례이며, 반대로 경제특구, 경기장,

지방자치 20년 : 지역발전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방향

컨벤션 센터 등 선호시설 입지 선정을 둘러싼 지자체의 과열 경쟁으로 인하여 PIMFY 갈등사례도 빈번하게 발생

4) 민선 4기(전환기 : 2006~2010년)

- 민선 4기는 지방자치제도의 질적 전환이 추진된 시기로서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적용되고,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며,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전문가의 지방의회 진출이 확대
- 지역발전 분야에서는 이명박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에 따라 3차원적 지역발전체계가 가동
 - 전국을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차별화된 권역개발 추진
 - 특히 광역경제권의 육성을 위하여 선도산업육성사업, 인재양성사업 등 핵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의 추진체계로서 광역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2009년)
- 지방행정구역의 재조정과 행정의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국회 내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행정계층의 축소와 광역화 등의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
 - 지자체 간 자율통합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4개 후보지역 중 마산·창원·진해만 통합에 성공(2009년)
 -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발족(2008년)으로 위원회 출범 후 1년간 697건의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

5) 민선 5기(정착기 : 2010~2014년)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2011년까지 지속되어 총 1,509건의 이양사무를 발굴하였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국토·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

-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정계층 축소, 광역화, 지방행정구역 재조정 등을 논의
-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및 지방교부세제도를 개선
 - 지방의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였으며, 지역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부터 참여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
-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이 도입되고 그 일환으로 지자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

〈표 1〉 지방자치 20년의 연대별 추진과정

시기	핵심목표	주요정책
1기 : 도입기 (1995-1998)	민선지방자치제 도입	-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개선 - 지역별 관광개발, 지역축제 양산
2기 : 모색기 (1998-2002)	법·제도적 기반 구축	- 중앙 사무의 지방이양 촉진 - 지방이양추진법 및 위원회 설치
3기 : 추진기 (2002-2006)	분산형 지역균형 가속화	- 균특법, 균특회계 도입 - 강력한 지방분선정책 추진
4기 : 전환기 (2006-2010)	균형발전사업 구조조정	- 균형발전정책의 갈등표출, 방향전환 - 5+2 광역권정책 추진
5기 : 정착기 (2010-2014)	주민중심의 지방정책	- 지역행복생활권정책 추진 - 지방자치발전계획 추진

지방자치 20년 : 지역발전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방향

2. 지방자치 20년간의 지역발전분야 변화상

1) 지역경제 성장

- 지방자치 20년간 1인당 GRDP는 약 4배, 총 사업체수는 약 3배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의 총량적 성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
 - 다만 성장세의 변화는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광역시도에 비해 성장세가 두드러짐
- 특히 지역경제의 성장이 선거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당해 지역의 소득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특히 2000년대 이후 향토자원의 산업화(순창의 장류산업, 고창의 북분자산업), 지역축제 내실화(함평 나비축제, 금산 인삼축제, 무주 반딧불이축제), 신산업 창출(원주 의료기기산업, 대덕밸리 기술상업화체계 구축), 브랜드 개발(안성 안성맞춤 브랜드, 상주 자전거 브랜드), 마을 만들기(진안 으뜸마을, 충남 흥등마을), 교육·인재개발(장성 아카데미, 인제 마을혁신연구회) 등 자생적, 창의적 지역경제 활성화사례가 많이 등장

2) 지역 간 균형발전

- 지방자치 20년 동안 지역경제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과는 달리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성과가 미흡
 - 지역발전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지표는 소득수준이며 1인당 GRDP를 기준으로 볼 때 공간적 분포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지방자치 이후 점차 증가
-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197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노무현정부에서는 균특법을 제정하는 등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에는 한계가 있음

3) 삶의 질 향상

- 보건·복지, 도시·환경, 문화·여가 등으로 대표되는 삶의 질 서비스의 변화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그동안의 지역발전이 인프라와 문리적 시설 공급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복지시설과 문화체육시설 등의 공급도 급속도로 증가

〈표 2〉 지방자치 20년간 지역발전 분야의 변화상

부문	지표	1995	2014
지역경제	소득(백만 원)	9.3	35.6
	고용률(%)	43	50
	경제활동인구비율(%)	44	52
	총 사업체수(개소)	80,176	234,482
	1인당 GRDP 지니계수	0.165	0.341
보건복지	복지예산비중(%)	7.5	27.6*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개)	7.2	12.3**
	인구 천명당 사회복지시설수(개)	3.3	15.6*
	인구 천명당 보육시설수	8.2	16.6
	여성복지시설수(개소)	83	264*
	장애인고용률(%)	0.7	2.6
도시환경	주택보급률(%)	86.0	116.7*
	1인당 주거면적(m ²)	33.5	50.4*
	도로포장률(%)	74.5	82.5*
	상수도보급률(%)	82.9	96.3**
	하수도보급률(%)	65.9	92.1*
문화여가	공공도서관(개소)	290	865*
	박물관수(개소)	355	754*
	공연시설수(개소)	239	984*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수(개소)	3.8	8.7*
	지역축체수(개)	726***	664
	체육시설수(개소)	34,437	56,124*

주 : *는 2013년, **는 2012년, ***는 2006년 통계

지방자치 20년 : 지역발전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방향

II 지방자치의 공과

1. 지방자치의 성과

1) 지방분권의 확대를 통한 자치기반 구축

- 민선자치 이후 2007년 자치단체 조직·정원 운용에서 '총액인건비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지방의 자율권 신장을 위한 지방분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지방재정분야에서도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노력
 - 지방교부세 비율을 내국세 13.7%에서 19.24%(06년)까지 인상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
 - 지방소비세 도입(2010년), 예산편성지침 폐지(2005년), 지방채총액한도제 도입(2007년) 등 재원 확충과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조치를 시행

2) 참여와 공개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1995년 민선단체장 직접선거를 거치면서 선거과정을 통하여 주민이 정책에 대한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을 실현하고 지방행정과정에 참여
- 주민투표제('04), 주민소환제('05), 주민감사청구, 조례의 제정 및 폐기청구(주민발의, '06), 주민참여예산제('11) 등 직접민주주의 실천수단의 도입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
 -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자치의 이념과 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를 지방재정운영에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2015년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치고 시행중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행정과정 공개를 통해 지방행정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
 -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시행, 읍부즈만 임명, 재정운영공개조례 제정, 정책실명제, 인터넷 민원 업무 처리 공개 등 다양한 시책 운영

〈주민의 행정참여방식 사례〉

- 행정서비스 리콜제 : 2003년 경남에서는 주민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책의 보완과 취소를 요구
- 민원행정서비스 리콜제 : 2007년 경남 거창군에서는 각종 민원사무 처리시 업무과실 또는 지연 처리로 인해 민원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 실시
- 민원배심제 : 2000년 대구 수성구에서 주민편의시설이나 혐오시설 등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인·허가 신청에 대해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민원을 심사
- 시민배심원제도 : 2012년 서울시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민원 배심법정에 처음으로 도입
- 시민계획단 : 2012년 수원시에서 2030수원시 도시계획을 시민과 청소년의 집단지성으로 수립

3) 주민지향적 서비스 제공과 창의행정 구현

- 주민 입장에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가장 체감적으로 느끼는 변화는 단연 민원행정서비스의 신속화 및 질적 향상을 꼽을 수 있음
-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화 기술을 바탕으로 민원서비스 시스템의 개발·활용을 활발하게 추진
 - 예 : 안방민원배달제 (홍천군, 고령읍 등), 노인·장애인 민원택배서비스(창원시, 상주시 등), 재택 전자민원제도(서산시, 진도군 등), 민원처리사전예고제(울산광역시, 용인시 등) 등

4) 지역발전 역량 및 지역경쟁력 제고

-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과 지자체장의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 비해 크게 증대
 - 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하거나 신산업을 유치·육성하는 등 주민의 소득 및 고용 창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
- 또한, 문화·관광·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활발히 전개

지방자치 20년 : 지역발전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방향

- 지방행정에 경영방식이 도입되면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과 이를 판촉하는 마케팅활동을 의욕적으로 추진

5) 자치단체 간 협력적 관계 구축

- 중앙-지방 간 종래의 수직적 지도·감독체계에서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수평적 협력관계로 변모
 - 정부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상호 간,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상호 간, 시·도의회 의장 상호 간, 시·군·구의회 상호 간의 수평적 협의체가 구성·운영되었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에도 다양한 방식의 협의체가 구성·운영되어 자치단체의 국정참여가 활성화
-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치단체 간 자율적 협력이 증대함으로써 님비 해소 등 자치단체 상호 간 갈등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2. 지방자치의 한계

1) 실질적인 분권 미흡

- 민선 2기부터 관련 법령 제정,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양적 또는 질적 실적은 미흡
 - 지방이양 실적이 미흡한 데에는 기본적으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정부가 사무의 지방이양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임
- 양적 실적의 충족만을 위해 단위사무를 중심으로 사무이양이 이루어짐으로써 사무이양 효과가 의문시됨
 - 조직·인사·재정의 문제가 함께 고려된 기능중심의 포괄적 이양이 부진하여 지방분권(decentralization)이 아니라 행정분산(deconcentration)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제기

- 노무현정부 이후 효율적인 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 중심의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 하였으나 특별법과 특별회계로 뒷받침되는 중앙집권적 추진체계를 크게 탈피하지 못함

〈표 3〉 지역발전 추진체계의 변화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정책 기 조	정책 목표	혁신주도의 공간적 균형발전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특화발전	지역행복 및 삶의 질 향상
	정책 수단	가능 분산형 균형발전정책 - 세종시 건설 - 혁신·기업도시 건설 - 4+9 지역전략산업 육성	5+2 광역경제권정책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 광역경제권 인재양성 - 30대 선도프로젝트 발굴·추진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 지역생활권 구성·운영 - 생활권 선도사업 추진 - 삶의 질 서비스 제공
	정책 대상	행정구역	행정구역 + 광역권(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행정구역 + 생활권(지역행복생활권)
계획		(법정계획) 국가균형발전계획 - 부문별 계획 - 지역혁신발전계획	(법정계획) 지역발전계획 - 부문별 계획 - 광역발전계획 (임의계획) - 초광역권개발구상 - 시·도발전계획 - 시·군·구발전계획	(법정계획) 지역발전계획 - 부문별 계획 - 시·도발전계획 (임의계획) -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추 진 체 계	추진 조직	중앙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부처 지방 : 지자체	중앙 : 지역발전위원회, 부처 지방 :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지자체	중앙 : 지역발전위원회, 부처 지방 : 지자체
	재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개발사업계정 - 지역혁신사업계정 - 제주계정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역개발계정 - 광역발전계정 - 제주계정	지역발전특별회계 - 생활기반계정 - 경제발전계정 - 제주계정 - 세종계정
	거버 년스	지역혁신협의회(법정기구)	지역발전협의회(임의기구)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법정기구)
제도		균특법 제정(2004.1.10.)	균특법 개정(2009.4.22.)	균특법 개정(2014.1.7.)

지방자치 20년 : 지역발전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방향

2)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지속

- 지난 40년 간의 인구분산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 및 기능의 집중은 크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비록 수도권 집중의 속도는 줄었지만 과도한 수도권 인구비중은 크게 해소되지 않아 '70년 28.3%, '80년 35.5%, '90년 42.8%, '00년 46.3%, '10년 49.9%로 계속 증가하여 수도권 인구가 총인구의 절반을 초과
- 생산과 소득의 공간적 불균형도 계속 심화되어 1인당 GRDP Gini계수가 확대
 - GRDP의 총량은 크게 늘었지만 지역적으로는 경기, 인천, 충남, 경북 등이 성장세가 두드러진 반면 인천, 강원, 전북, 전남 등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상황의 지역 간 편차가 큼
- 특정산업(전략산업, 선도산업)이나 특정지역(비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은 저성장과 저고용으로 대표되는 뉴노멀시대에는 한계에 봉착
- 지역격차가 종래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최근에는 신수도권(수도권 + 충청권)과 지방 간,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구도심과 신개발지간 등 광역적 또는 국지적으로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임

3) 취약한 지방재정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도 지방재정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며 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도 심화된 실정
 - 재정자립도가 '95년 63.5% → '01년 57.6% → '10년 51.9% → '14년 45.1%로 계속 악화되어 자체 재원으로 직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08년 30개에서 '14년 78개로 증가
 - 2014년 현재 자치단체의 채무잔액은 28.2조 원이며 지방공기업 부채 73.6조 원을 합하면 자치단체 부채는 100조 원을 상회
- 지방재정의 취약성은 지방자치 실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조적 문제
 - 자체재원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의존재원인 보조금 비중은 2000년 19.7%에서 '14년 37.3%로 빠르게 증가

- 지방세목과 세율 결정권을 중앙 정부가 결정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에 근본적인 한계
- 선심성·전시성 지출, SOC사업 채무, 채무상환 경상비용 등의 증가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
 - 2005년 복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자치단체가 사회복지에 투입하는 재원이 '11년 28.5조 원에서 '14년 42.5조 원으로 연평균 14%씩 증가함으로써 같은 기간 자치단체 재원증가율 5%를 크게 초과
- 지역 간에도 인구 및 소득 기반의 격차가 심화되어 지방재정력의 격차를 초래하고 공공서비스 질의 격차로 연계

4) 지방행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 민선 자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이 커지면서 재정여건과 사업 타당성 검토가 부실한 대형사업과 선거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집행이 발생
- 각종 여론 매체에서 지방자치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비리, 선심행정, 예산낭비, 난개발 등이 지적되면서 지방자치의 폐해를 부각시키는 수단으로 작용
 - 대표적 사례로는 경전철 사업, 자치단체 호화청사 신축, 국제행사 경비, 축제 남발 등을 꼽을 수 있음

5)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 간 갈등

- 지방자치로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방의 폐쇄적 문화가 표출되어 자치단체의 내부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고립된 지방화를 초래
 - 지역 이기주의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해와 겹쳐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각종 국책사업의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지역발전을 위한 선의의 지역 간 경쟁이 변질되어 과다 경쟁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며, 특히 혐오시설의 입지기피와 선호시설의 유치경쟁에서 갈등 및 분쟁이 심화

지방자치 20년 : 지역발전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방향

III 지역발전 환경 변화와 새로운 정책 트렌드

1. 정책환경의 변화

1) 저성장과 뉴노멀의 상시화

- 미국 등 선진국 경제는 2% 이하의 낮은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유로권은 1% 이하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 중국 등 신흥국들도 과거 10% 수준에서 6~8%로 하락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는 추세임
 -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국의 경제에서 뉴노멀(New Normal)이 상시화 되었고¹⁾, 중국조차도 '신창타이(新常态)'에 들어섰음을 공식 표명²⁾
- 세계적 저성장 기조에서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은행은 대외여건과 국내소비 위축 등을 감안해서 2015년 GDP성장률을 연초 3.4%에서 2.8%대로 하향 전망
- 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의미로 1% 성장이 대략 1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가정할 때, 성장률이 4~5%에서 2~3%로 하락하면 약 30~4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
 - 줄어드는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역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앞으로 지방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과제일 것임
- 경제성장률이 낮은 이유는 잠재성장률이 낮기 때문으로 2014년 현재 잠재성장률은 3.5% 수준이며, 국회 예산처는 2014~2018년 전망에서 연평균 3.6%로 전망하고 있어 산업구조 변화, 투자부진,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잠재성장률은 단기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 여기에 낮은 금리와 환율 등이 성장률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대변혁(Florida R, The Great Reset)이나 '창조적 혁신'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이 없이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음

1) '뉴 노멀(New Normal)'이란 세계 최대의 채권펀드인 피코의 최고경영자 무함마드 엘 에리안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칭하여 사용한 용어로서 정부·가계·기업의 광범위한 부채 감축으로 나타나는 저성장·저소득·저수익률 등 3저 현상이 일상화되어 그 자체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신창타이(新常态)'는 뉴노멀을 중국식 한자로 번역한 것으로 말 그대로 '새로운 정상상태'를 뜻하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5년 3월 말 보야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중국경제가 신창타이에 들어섰음을 공식화했다.

2)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 등 인구사회적 변화

- 저출산, 고령화 및 다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인구사회적 구조의 변화가 심각
 - 2014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224개국 중 219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
 - 고령화 추세도 가속화되어 65세 이상 인구가 2010년 인구의 11%에서 2030년 24.3%, 2060년 40.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180만 명으로 총 인구의 3.6%를 차지하는데, 외국인에 대한 개방정책이 지속된다면 2020년이면 그 비율이 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적 잠재력과 활력(vitality)을 약화시키는 한편 고령화와 다문화, 그리고 특히 소득양극화는 계층간, 인종간, 연령간 위화감을 조성해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
 - 이들 문제를 사회·경제정책 차원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상생 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국가정책과 지역정책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음

3)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의 위기

- 2011년 세계미래학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미래연구 싱크탱크인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발표한 '유엔 미래보고서'에서는 15개 미래 주요 도전과제 중 첫 번째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꼽고 있음³⁾
 - 1970년대 이후부터 지구는 지속적인 온난화를 겪고 있으며, 2005년과 2010년의 평균기온은 기록상 최고치를 기록
 -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 압축성장 과정에서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기온상승 및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를 보임

3) Millennium Project 선정 15대 미래 도전과제에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발전, 깨끗한 수자원 확보, 인구 증가, 민주주의 확산, 장기적 관점의 정책결정,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빈부격차 완화, 신종 질병 위협, 의사결정 역량 제고, 신 안보전략과 인종갈등 및 테러, 여성지위 신장, 국제적인 범죄조직 확대, 에너지 수요 증가, 과학기술발전과 삶의 질, 윤리적 의사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기획재정부, 2011.8.18., 보도참고자료).

지방자치 20년 : 지역발전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방향

- Rifkin은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에서 미래 먹거리는 녹색산업과 IT산업의 접목으로 이뤄진 '융복합 산업'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
 - 산업적으로는 전기자동차, 해수농업, 탄소 포집 및 재활용(carbon capture and reuse), 태양열 발전 위성, 인공배양육, 자기부상열차 등 연구개발에 초점
 - 정책적으로는 탄소세·배출권거래제 시행, 산림벌채 감소, 산업효율성 제고, 열병합발전소 개발, 화석연료 보조금의 재생에너지 투자로의 전환 등 필요
- 국제사회가 탄소저감 대책을 더욱 중시할 것이기 때문에 녹색성장 정책에서 선두주자임을 자처하는 우리나라는 이 부문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임
 - 특히 청정에너지 개발 등 저탄소 녹색기술은 그 특성에 따라 마을단위로 개발, 장려, 상업화할 수 있고, 녹색기업 역시 마을 단위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육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수단으로 잠재력이 매우 큼

4)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 증대

- 지방의 독자적 이니셔티브를 존중할 때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성장(inclusive growth)이 가능하며, 지방분권이 전제되지 않으면 특화발전은 물론 자생적 성장 자체가 발현되기 어려우므로, 지방의 역량 강화와 책임의식 고양을 위해 지방분권이 조기에 정착되어야 함
 - 지방분권은 지역주민이 거주지역에 대해 긍지와 애착을 느끼게 되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사업을 지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국내외를 막론하고 성공하는 지역발전사업의 이면에는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지역거버넌스가 크게 작용함
- 지방자치 출범 20년이 경과하여 지방분권에 기초한 지방역량 강화와 자립적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크게 증대할 것임

5) 복지수요 급증

- 교육, 의료, 주거 등 3대 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지만 지금까지는 복지를 '퍼주기'라고 인식해 왔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큰 호응을 받지 못했음
 - 복지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취약계층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삶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낭비나 퍼주기와는 다른 인식을 가져야 함
- 스스로 적정 또는 최저수준의 복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장기능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조달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 가구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복지예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자금이 보다 생산적이고 공평하게 쓰여야 공정한 사회로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음
 - 복지업무의 지방 이양에 따라 지자체의 복지 관련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
 - 정부의 복지정책은 수혜대상자의 대다수가 지역 주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 되어 추진된다면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복지효과에 있어서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농어촌에서 노인복지, 도시에서의 저소득층과 노인 관련 복지, 의료 및 보건 관련 복지 등은 지역발전의 목표이자 수단의 성격을 가짐

2. 최근 지역발전정책의 트렌드

1) 장소보다는 사람이 우선하는 지역발전

- 선진국 진입을 앞둔 국민행복 시대에는 지역발전의 대상을 장소(지역)보다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주민)으로 전환하는 인간주의적 발전이 필요
- 지역발전에서 지역의 경제적 부를 증대시키는 것보다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보다 중요해지

지방자치 20년 : 지역발전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방향

기 때문에 '장소의 번영'(place's prosperity)보다는 '사람의 번영'(people's prosperity)을 지향해야 함

- 사람을 목표로 하는 지역발전을 추구해야만 대도시 인구집중과 수도권과 지방 간 공간적 차별을 극복하고 지방의 정주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2) 주민 행복 또는 삶의 질을 중시

- 국가 또는 지역의 총체적 풍요가 국민이나 주민 개인의 풍요와 반드시 직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의 외형적 성장이 주민의 삶의 질이나 행복도와 반드시 비례하는 것도 아님
 - 50년만에 국민소득은 285배, 수출규모는 16,600배 증가했으나 대조적으로 OECD국가 중 이혼율은 7위, 자살률은 1위이며, 2015년 국민행복지수는 158개 국가 중에서 47위를 차지(UN, World Happiness Report)
- 최근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삶의 질 측면까지 확장된 개념을 통하여 인간의 행복도 차원에서 발전의 개념을 이해하려는 경향 대두
 - 소득증가에 따라 행복도가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이 지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증가가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행복역설(Easterlin's paradox)이 제기
- 고령화 · 저성장시대에서는 지역발전의 궁극적 목표를 '주민의 행복 또는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여 최종 수혜자의 복리증진에 직결함으로써 인간주의적 발전을 지향해야 함

3) 지역 간 협력 및 생활권 중심의 서비스 공급

- 단일 행정구역 단위의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점차 복수의 자치단체 간 협력에 기초한 공동생산방식이 확대되는 경향임
 -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를 행정구역별로 획일적으로 배분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투자의 중복과 예산 낭비를 해소하고 서비스 결핍을 보완
 - 생활권 내에서 지자체 간 교차이용, 공동생산, 기능별 특화 등의 다양한 전략을 통해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개선

■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지역발전의 공간단위로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

- 지역행복생활권은 선진국의 새로운 경향인 소(하위)지역(sub-region) 단위의 권역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실질적 생활권을 의미하며, 이 생활권 내에서 삶의 질 서비스의 자족적 공급을 통하여 주민행복을 향상시키려는 전략

4) 미시적 소프트 발전을 지향

- 고령화·저성장 시대에서는 인프라 위주의 물리적 개발보다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소프트 지역발전을 지향해야 함
 - 지역에 소재한 자원, 인력, 기술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내발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성장의 과실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역내에서 확대 재생산되도록 해야 함
- 산업, 교통 등 거시적 개발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에 직결된 미시적 소프트 사업에 치중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
 - 물리적 시설사업은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시설의 유지관리 부담과 시설이용의 유희화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5)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발전

- 최근 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협동조합 등)의 역할과 가치가 부각
 -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발전은 행정이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지역 문제를 지역의 구성원이 스스로 해결하는 제3의 대안으로 평가됨
- 주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이 강조되면서 지역공동체 회복과 자발적인 역량을 통하여 구성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생활자치의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음

지방자치 20년 : 지역발전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방향

〈그림 1〉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자체의 대응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	지자체의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의 번영'에서 '사람의 번영'으로 발전의 관점 전환 - 부문별 접근에서 공간통합적 접근으로 전환 - 인프라 공급 위주의 물리적 개발에서, 창조와 혁신이 강조되는 소프트 발전으로 전환 - 산업·생산 중심형 사회에서 문화·관광·서비스 중심형 사회로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수요맞춤형 개발체제 강화 - 생활밀착형 정주기반 인프라 확충 및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수준 제고 - 다차원적 도시 및 농촌 재생 추진 - 지역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강조 - 지역공동체 중심의 지역발전사업 활성화 - 인접지역과 연계 협력을 통한 추진체계 강화

IV 자치시대의 지역발전 방향

1) 일자리 창출을 지역정책의 최고목표로 설정

- 지역정책의 목표를 '지역발전'을 넘어 '지역고용'으로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으로 지향
 - 200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을 둔화와 함께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률)가 저하되어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일자리 창출역량이 약화
- 일자리아말로 가장 확실한 복지이자 삶의 질 요소이며 지역발전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임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 '성장없는 고용'에서 탈피⁴⁾
- 지역발전사업의 발굴·선정하거나 지역발전사업의 추진실적 평가의 준거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
 - 지역발전정책과 사업을 재평가하여 기업 및 사람 중심의 고용친화적 사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

4) '성장없는 고용'이란 금융위기 이후 투자와 성장이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고용의 양적 증가가 나타남으로써 투입되는 노동량 증가만큼 생산량이 늘지 않아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 내발적 지역발전을 통하여 지역 내에서 일자리-소득-소비-투자-성장이 선순환되는 순환경제 시스템을 정착
- 지역산업정책의 기초를 바꾸어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분야의 지역기업 육성에 주력
 - 취업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관광, 의료보건, 사회복지 등 서비스 분야를 집중 지원

2) 고령화 · 다문화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기초지자체들이 고령화와 다문화의 진전으로 인구구조가 왜곡되어지면서 인구사회학적 위기에 직면
 - 고령화로 노동활력이 저하되고, 농촌지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있으며,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복지재정 및 사회통합에 대한 부담이 가중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다문화는 향후에도 확고부동한 추세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고령인구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여 지자체의 활력을 제고
 - 고령인구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인복지를 생산적으로 해결하고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한 교육, 보건, 취업 등의 활동을 지원
 -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 주도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
- 보건체계 및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복지비용의 절감을 도모함으로써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비한 복지체계를 정비
- 지역발전 분야에서도 글로벌 인적자원으로서 다문화인구를 적극 활용하며 이를 위해 다문화인구의 커뮤니티 정착 및 다문화자녀의 교육을 적극 지원

3) 지역공동체 복원 및 육성

- 압축성장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이 모두 공동체가 와해되는 심각한 현상에 직면

지방자치 20년 : 지역발전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방향

- 도시는 아파트 중심의 생활공간으로 인해 '익명의 공간'으로 전락하였으며, 농촌은 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선별적 유출로 인해 공동체 존립 자체가 위태
- “지역공동체 창조가 21세기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피터 드러커의 표현대로 지역공동체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주체로 육성할 필요
 - 박근혜정부에서도 국민행복시대의 구현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
-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자율적·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
 - 지역공동체의 활동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
 -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자치·위임자치”로부터 “생활자치”를 지향
- 지역공동체 단위의 생활형 지역일지리를 창출
 - 자립성(수익성)과 공공성(사회성)을 함께 갖춘 지역공동체사업을 발굴·육성
 - 지역공동체를 지역의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육성하여 일자리와 복지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

4)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 추구

- 세계 14대 경제대국 이면에 자살률은 OECD국가 1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를 기록함으로써 국민행복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수준에 도달
 - 높은 자살률은 열악한 현실을, 낮은 출산율은 어두운 미래를 대변하는 지표임
 - 국내외 각종 조사에서도 삶의 질과 행복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짐
- 지역발전정책은 거시적 균형정책 못지않게 미시적 생활체감형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 지방의 인구유출의 핵심 원인은 자녀 교육, 일자리 부족, 생활환경 문제 등 일상생활에 직결된 문제에 있음

- 산업·인프라 위주의 양적 성장정책에서 삶의 질 위주의 질적 발전정책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지역 정주성과 삶의 만족도를 제고
- 생활권 중심의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삶의 질 서비스를 공동으로 해결
 - 지역생활권 단위로 생활서비스의 협력적 공급·이용을 촉진
 - 일본은 '14년 5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정주자립권에서 보다 확대된 새로운 광역연계 방식인 연계중추도시권, 3대도시권, 광역-기초 간 연계 등을 도입

5) 지방의 추진역량과 자율성 강화

- 현행 지역발전 추진체계는 주요 정책이 중앙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획되고, 지방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띠며 그 과정에서 특별회계를 통한 보조금 배분을 수단으로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는 중앙주도의 추진방식임
 - 자치단체는 스스로의 창의와 노력에 기초한 내발적 발전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하는 외생적 발전에 몰두
 - 한정된 지원을 얻어내기 위하여 타 지역과 제로섬(zero-sum) 경쟁에 나서게 되어 자치단체 간 협력보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
-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개방화된 지금에는 과거 중앙집권형의 추진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함
 - 지역의 물리적·총량적 성장보다 주민의 체감적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이 중시되는 최근의 세계적 트렌드를 감안할 때 주민의 분화된 수요와 욕구에 밀착된 서비스 공급주체는 당연히 자치단체임
- 지역발전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의 구성에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는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
- 지역발전 투자재원 확보 및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지특회계 및 포괄보조금제를 개선
 - 부처편성 계정의 사업들 중 부처의 고유업무로서 지역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지역 밀착성이 큰 사업은 시도 자율편성인 생활기반계정으로 편입하며, 소득창출, 일자

지방자치 20년 : 지역발전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방향

리 지원, 복지·의료, 균형발전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은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

- 자치단체 자율편성인 포괄보조사업의 운용방식을 제도의 본질에 맞도록 개선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사업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역 간 발전수준 및 재정수요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맞춤형 특화발전과 재정형평화 기능을 보강

- 지방의 사업추진 전문성을 제고하고 제도 및 기획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워크샵 등을 활성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특회계에서 지원

6) 주체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지역발전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다양한 주체의 시책이나 사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연계·조정·통합되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함

- 향후에는 국가발전이 총량적 경제성장보다는 지역의 개성 있는 내발적 발전을 통해 견인되며, 중앙정부의 주도보다는 정부와 자치단체 및 지역 내 기업, 대학,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지역'중심의 사고이며 바로 분권형 지역발전 거버넌스의 요체임.

- 거버넌스를 작동시키는 핵심 기제는 주체 간 협력이며, 관련 주체들의 수평적·수직적 또는 지역 내·지역 간 협력에 기반한 다층적 지역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 중앙부처 간 : 중앙부처 간 칸막이식 행정 방지와 정책 조율을 위해 지역 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

- 중앙과 지방 간 : 힘의 불균형에 기초한 일방적 지시나 통제보다 사무배분과 역할분담 및 분권화를 통하여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전환

- 공공과 민간 간 : 지역 내 민관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자치단체 중심의 수평적·통합적 협력체계 구축하여 지역 내 NGO와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삶의 질 분야의 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확대

- 자치단체 상호 간 : 박근혜정부 지역생활권정책의 성공 요인은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있으며 생활권 내 지자체 간 공공서비스의 교차이용, 공동생산, 기능별 특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여 상시적으로 생활권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필수적인 협력사업에 대한 특단의 우대조치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시책 마련·시행

2015

- 91호 2015년도 지방자치의 쟁점과 방향
- 92호 2015년도 지방재정 정책의 운영방향
- 93호 지방자치단체 성과예산제도의 도입 쟁점 및 정책방향
- 94호 국제통계로 본 대한민국의 자연재난 및 사회안전 수준
- 95호 공공체육시설의 지역 간 격차 해소방안
- 96호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의 쟁점과 적용가능성 탐색
- 97호 지방투자사업의 투자심사 동향 및 개선방향
- 98호 주민자치와 마을사업에 대한 사회성과 보상방식의 지원제도 도입
- 99호 지방세외수입 및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 100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지방자치
- 101호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현황과 과제

2014

- 72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모델(2)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평생교육형, 지역자원형, 다문화어울림형을 중심으로
- 73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 74호 지방자치단체 코퍼티션(Cooperation) 향상 방안
- 75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국 네트워크 형성과 정책방향
- 76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기반 인적자원 관리(CBHRM)와 인사역량평가
- 77호 건강보장과 지방자치
- 78호 6.4 지방선거의 결과 분석 및 함의
- 79호 재난안전대책의 현재와 미래
- 80호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사회복지재정의 다각화 방안
- 81호 지역주민 행복도 지수 도출 개념 및 측정방안
- 82호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현실과 개선방안
- 83호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정책
- 84호 우체국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제공방안
- 85호 책임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 86호 공공정책의 생태계 조성 전략과 회복력(resilience)의 개념적 적용
- 87호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추진방안
- 88호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커뮤니티매핑
- 89호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 90호 새마을운동의 미래와 방향

